‘광역경제권’ 신규사업비 분석해보니

절반이 영남 편중… 지역격차 더 심화

호남 3개 사업 불과…추가 배정 필요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5+2 광역경제권’ 계획이 오히려 영호남 간의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5+2 광역경제권’ 계획의 핵심 축인 30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에서 호남권과 영남권의 신규 사업비가 적게는 15배, 많게는 29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진정으로 추진한다면 호남권에 신규 사업을 추가로 배정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30대 선도프로젝트**=정부는 지난해 9월 5+2 광역경제권 계획의 근간으로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을 선정했다.

30대 선도 프로젝트 가운데 세부 사업은 총 91개로 전체 사업비는 120조2천260억원이며 이 가운데 계속사업은 57개 70조6천403억원이며 신규사업은 34개로 49조5천857억원이다.

문제는 신규사업의 규모. 계속사업은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추진되는 사업인 반면 신규 사업은 새로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지역의 미래를 뒤바꿀 수 있는 미래형이기 때문이다.

신규 사업의 규모가 클수록 그 지역의 미래는 역동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반면 신규 사업이 적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미래가 밝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호남권이 전체 광역경제권 가운데 제주권을 제외하고 신규사업 규모가 가장 적다는 점은 호남의 미래가 상대적으로 어두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영호남 경제적 격차**=‘5+2 광역경제권’ 계획이 현재대로 진행된다면 호남권의 경제적 낙후도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어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다.

우선 영호남의 경제적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경제권 구성에서 호남권은 단일 권역으로 묶이고 영남권은 대경권과 동남권 등 2개 권역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30대 선도프로젝트 가운데 신규 사업비 규모가 제주권(534억원)을 제외하고 호남권(1조5천104억원)이 가장 적은 반면 영남권의 신규사업비(동남권 8조4천억원, 대경권 15조원 등 총 23조3천819억원)는 전체의 5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아직까지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동남권 신공항 사업비(밀양 건설시 11조원, 가덕도 건설시 20조원)을 포함할 경우, 호남권과 영남권의 신규사업비 격차는 29배에 이를 전망이다.

◇**신규사업 추가 배정**=이에 따라 정부가 진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원한다면 호남권에 신규사업을 추가로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호남권의 신규사업비 규모가 충청권(13조5천억원)과 수도권(7조9천억원), 강원권(3조2천억원)에도 못 미친다는 점에서 정부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호남(호남권)과 영남(동남권·대경권) 선도프로젝트 신규사업 현황 (단위:억원)

권역별	사업명	기간	사업비	국고	기타
호남권	계		15,104	12,891	2,213
	①화양-적금 연육교	2009~2019	4,711	4,711	
	②압해-암태 연육교	2009~2019	5,528	5,528	
	③광주외곽순환도로	2008~미정	4,865	2,652	2,213
동남권	계		84,162	50,531	33,631
	①동서8축(함양-울산) 고속도로	2009~미정	52,520	27,024	25,496
	②동북아 제2허브공항	미정			
	③부산외곽순환도로	2009~미정	19,842	11,707	8,135
	④마산-거제 연육교	2010~2017	11,800	11,800	
대경권	계		149,657	78,709	70,948
	①동서6축(상주-영덕)고속도로	2009~2015	32,018	16,541	15,477
	②동서7축(울산-포항)고속도로	2009~2013	21,104	11,271	9,833
	③동서7축(포항-영덕-삼척)고속도로	2009~미정	75,464	40,751	34,713
	④대구외곽순환도로	2009~미정	7,707	4,162	3,545
	⑤유림문화공원	2010~2014	1,946	973	973
	⑥한국문화테마파크	2010~2016	3,433	1,461	1,972
	⑦신화랑풍류체험벨트	2010~2016	2,062	1,012	1,050
	⑧가야국 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 개발	2010~2016	2,097	874	1,223
	⑨역사문화공원	2010~2016	1,049	525	524
	⑩낙동강 이야기나라	2010~2016	1,409	469	940
	⑪삼국유사 가온누리	2010~2016	1,368	670	698

자료=이용섭의원실

광주U대회·여수박람회 4대강 정쟁에 결국 ‘발목’

국회 지원특위 구성 의결 무산

4대강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가 파행되면서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지원법’ 처리와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구성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지역 주요 현안이 여야 정쟁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여야는 8일 본회의를 열어 U대회 지원법을 다룰 국회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와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위 구성 결의안을 각각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이날 국토해양위에서 날치기 논란이 일면서 오후에 본회의가 속개되지 못해 두 특위 구성안의 의결이 무산됐다.

이에 앞서 7일에는 ‘2020년 월드컵 유치 지원’ 내용을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구성 결의안에 포함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 때문에 본 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특히 4대강 예산 등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심화할 경우 국회 파행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특위 구성이 당분간 어려울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U대회 지원법 처리와 여수박람회 준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U대회 지원법을 다룰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의 경우 한나라당이 구성에 소극적일 뿐 아니라 위원장 및 위원 선임 등을 놓고 여야 간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어서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에서 U대회 지원법을 언제 다룰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처럼 U대회 지원법 처리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조직위 출범이 내년으로 늦춰지면서 내년 4월로 예정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측의 대회 준비상황 점검 등에 대비할 수 없는데다 하계U대회 종합계획 수립 등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김윤석 광주시 경제부시장은 “대회 유치 확정 후 6개월 안에 조직위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국제대학 스포츠 연맹의 규정을 어겨 국제적인 신인도의 추락이 우려되고 있다”며 “조직위가 당장 추진해야할 U대회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안타까울 뿐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광주시는 경기장·선수촌 건립 등 인프라 구축 등 현안을 처리하는 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는 판단이다. 대회 개최 1년 전인 2013년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사전 리허설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향후 남은 4년이 결코 길지 않다는 것이다.

당장 광주 하계U대회 조직위가 국제경기 대회 주최 노하우 축적을 위해 내년 8월 광주에서 개최할 ‘세계 여자 주니어 핸드볼 선수권대회’ 준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U대회 지원법을 애초 상정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U대회 지원법 통과가 시급한 상황에서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가 언제 구성될 수 있을지 난망하다”며 “이럴 바엔 해당 상임위인 문방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U대회 지원법을 빨리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도시계획 수립할 때 자전거 시설 의무화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내년 5월 말이나 6월 초부터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자전거 주차시설이 의무화돼 있는 공영 노외주차장 외에 노상 주차장과 부설 주차장에도 일정 비율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초·중학 교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과 지역 주민을 상대로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을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도 개정돼 자전거안전모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끌고 가기 등의 규정도 마련됐다.

/연합뉴스

자원봉사…영광의 얼굴들 ‘2009 광주시 자원봉사자대회’가 8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훈장, 표창 수상자들이 연단에 올라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형범(60·광주시 서구)씨에게 국민훈장 석류장을, 나머지 자원봉사자들에게는 표창과 자원봉사 영예인증서 등을 수여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공항 국내선 무안공항 이전하면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박준영 전남지사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8일 “광주공항 국내선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해 오면 무안공항~광주 간 고속도로 통행료의 감면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날 전남도의회 김철주(민주·무안) 의원이 도정질의에서 ‘무안공항 활성화 대책’ 등을 묻자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무안공항~광주 간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기 전에는 전남도와 공항공사가 50%씩 부담해 통행료를 면제했으나 완전개통 이후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국내선이 이전해 오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지사는 “무안공항 톨게이트를 이용하는 차량에 한해서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으나 국내선이 이전해 와야 하며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항공사 재정지원 예산을 통행료 감면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예산체계상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또 “호남고속철의 무안공항 경유는 철도와 공항의 연계 방침에 따라 추진 중이며 언젠가는 시작할 호남~제주터널 건설계획과도 관련될 수밖에 없으므로 반드시 투자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